

사설

### 총체적 난국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올해 초 MBC의 김재철 사장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을 때, 당시 언론노조MBC본부장이었던 이근행 PD는 “단체협약은 민주화 투쟁으로 군사독재 시절을 벗어나면서 얻은 투쟁의 결실이다. 단협 해지는 다시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일갈한 바 있다. 권력의 방송 길들이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있어왔던 일이다. 이런 현상은 그 자체로 아직 한국의 방송환경이 덜 여물었다는 반증이다.

이블SO의 재송신비용 지불 거부 사태는 열악한 지상파 직접수신환경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유가 어찌되었든 방송뉴스의 관제화와 연성화가 시청자들을 지상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작금의 방송환경은 총체적 난국이다.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심각하게 망가져있는 상태여서 어느 곳부터 손을 대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풀 실마리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바야흐로 ‘방송에게 잔혹한 시절’이 흐르고 있다. 2년 여를 끌어온 케이블SO의 지상파 재송신비용 지불 거부 사태는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무로다채널 방송·수신환경개선을 위한 지상파 디지털 전환사업의 행보 또한 주파수 경제 등 정부의 정책적 소의 속에서 그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외적으로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들이 헌법조차 무시하며 방송시장을 어지럽히고 있고, 방송광고시장은 국회 나랏님들의 무심함에 ‘무법상태’로 방치된지 오래다. 방송사의 내부를 들춰보면 더욱 심각한 내상이 도사리고 있다. SBS는 결단 번지르한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운영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MBC 경영진은 뜬금없이 PD수첩 제작진을 대폭 교체하는가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4대강 정책’을 다뤘던 KBS 추적60분을 표적심의하기도 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고 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혹시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런 현실에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디지털 전환의 효과가 극소수의 시청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책개선의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종편 사업자들은 죽기 살기로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의 입지와 영향력만을 믿고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의 심리적 마지막 선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감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다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실 속의 한계를 자기도 모르는새 체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늘어놓자니 방송사들의 요즘 처지가 한없이 작아보이기만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까지도 따뜻할까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30년 만에 수신료를 올리겠다는 KBS의 다부진 결심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고, 케

권력의 방송장악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편은 현장에서의 치열한 투쟁만이 분명하다. 이는 방송사 노조나 각 직능단체들이 앞장서서 부딪쳐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런 조직의 움직임보다 앞서야 할 것이 방송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다. 군사독재 시절에 방송이 시청자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 받아왔는지, 그 세월들로부터 방송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상기해볼 때다.

## 시민 없는 방통위, 방송장악에만 힘써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1기 방송통신위원회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1팀 팀장은 “시민 없이 오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며 방송장악에 나선 공공성 배신의 3년, 방통위는 결국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통해 정권재창출을 위한 도구일 뿐임을 스스로 자인했다”며 1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는 시민의 부재를 드러냈고, 현재의 방송시장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4개의 종편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의 허구성, 공공성에 대한 배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라는 여야의 합의 기구구성을 무색케 하며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하는 순간 방통

위는 시민의 부재를 드러냈고, 현재의 방송시장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4개의 종편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의 허구성, 공공성에 대한 배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라는 여야의 합의 기구구성을 무색케 하며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하는 순간 방통

## <PD수첩> 죽이기? VS <PD수첩> 지키기!



MBC 경영진의 ‘<PD수첩> 죽이기’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 200여개 관련 단체로 구성된 ‘<PD수첩> 사수 공동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PD수첩 법대위는 오는 1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MBC ‘<PD수첩>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PD수첩>은 시사교양국이나 MBC 차원이 아닌 ‘국민의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사태가 지속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 ‘검사와 스폰서’, ‘4대강과 대운하의 관계’ 등 수많은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PD수첩>은 김재철 사장 연임 이후 기존 제작진이 대대적으로 교체되면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최승호 전 <PD수첩> PD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재철 사장이 오고 나서 권력에 대한 비판 성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고, 이번 인사발령은 얼마 남지 않은 비판 저널리즘의 씨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문제는 현 정부가 비판

## 최시중 연임 ... 인사청문회, 벌써부터 난항 예상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연임시키기로 결정한 직후인, 지난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최 위원장 연임에 대한 민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현 정부 차원에서 방송통신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최 위원장이 연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오는 17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요청서를 통해 “(최 위원장이) 초대 방통위원장이면서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최 위원장의 연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 융합 정책 실패, 무리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선정, 방송탄압’ 등을 들며 최 위원장에 대한 ‘연임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최시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1기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통제’ 위원회로 활동해 왔다”면서 “(1기 방통위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30점으로 낙제”라고 평가했다. 무더기 종편 선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대학 신입생을 뽑을 때도 교수진과 수용능력을 고려한다. 종편을 4개나 허용했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광고시장의 파이를 생각한다면 종편의 수를 고려해야 했다”며 “현재 광고시장에서도 사활을 건 생존투쟁이 벌어지고 있어 종편 역시 결국 국내 인수합병으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을 저널리즘의 속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비판을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비판 자체를 압살하고 비판 주체를 숙아내려 하기 때문에 <PD수첩> 제작진을 사실상 정리하고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MBC 시사교양국(이하 시교국) PD 50여명으로 구성된 시사교양국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측의 이러한 행보에 맞서 윤용길 시사교양국장의 퇴진과 ‘<PD수첩> 죽이기 인사’ 철회, 프로그램의 자율성 확보 등을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시교국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측의 대응을 보고 제작거부 돌입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시교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PD수첩>을 비롯해, <불만제로>, <생방송 오늘 아침>, <7일간의 기적>, <MBC 스페셜> 등 10여개에 달해 PD들이 집단 제작거부에 돌입할 경우 상당수 프로그램의 차질이 우려된다. 시교국 PD들은 이와 함께 윤용길 시사교양국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윤 국장은 취임 이후 구성원들의 의사에 아예 무시하고 일방통행만 해왔다”며 “제작 PD의 생명인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한 국장에 대해 구성원들의 거부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임투표 실시 이유를 밝혔다.

## 먼지 쌓인 문방위 소관 법안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실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3월 현재 문방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6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 확인됐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개선 등을 다룬 방송법 개정안과 더불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설비제공 또는 상호접속 절차 등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국 FCC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 개입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은 지난 4일(현지시간)자로 “지상파 재송신 분쟁 때문에 발생하는 실시간 방송 중단을 막기 위해 FCC가 개입한다(FCC Seeks Ways to Halt Blackouts in TV-Fee Fights)”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FCC는 지난해 가을, 케이블비전시스템즈와 폭스브로드캐스팅이 재송신료 분쟁을 일으키면서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300만여 가구가 2주일 이상 미국 프라야구 플레이오프를 시청할 수 없었던 사태”를 언급하며, “방송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더욱 첨예해지면서 소비자가 가운데 끼인 형국”이라는 윌리우스 제너츠키

(Julius Genachowski) FCC 의장의 발언도 직접 인용했다. 또한, FCC가 앞으로 케이블· 위성 방송 등의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에게 지불하는 재송신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법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더 이상 실시간 방송 중단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FCC의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FCC의 이번 정책에 대해서 미 케이블·통신사업자협회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FCC의 개입을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 KBS실감방송연구팀, 방송기술상 수상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MBC ‘아미존의 눈물’(기획: 정성후, 연출: 김진만, 김현철)을 비롯하여 우수상 6개부문 12편과 공로상, 바른언 여성상, 방송기술상에 대한 시상이 치러졌다. 그 중 방송기술상에는 ‘KBS 실감방송 연구팀’이 선정됐는데, 방통위는 ‘시청자의 요구 및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고품질, 고품격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3DTV 활성화를 통한 방송장비 및 TV 수요를 신규 창출 하였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 KBS 이종화 국장 ABU Lifetime Achievement 상 수상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BU 디지털방송 심포지움 개막식장에서 KBS 미래미디어전략국 이종화 국장이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 이하ABU) Lifetime Achievement상을 수상했다.

ABU는 매년 방송발전에 공로가 큰 기술인을 선정해 ABU Lifetime Achievement 상을 수여하는데 올해는 세계 최초의 지상파 모방일방송인 지상파 DMB(T-DMB) 개발공로 및 KBS 뉴미디어 서비스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이 국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구광역시**  
디지털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교육

일시: 4월1일  
장소: KBS대구방송총국  
교과목: SNS와 방송 / 디지털 AV기술 / 라디오 오디오파일 등

- ..... 연합회 동정 .....
- KOBIA 컨퍼런스 준비회의, 2차 (3.4)
  - 연합회 운영회의 (3.6)
  - 조중동명 1차 불매운동 선포식 참석 (3.8)
  - 교육실무위원회 회의, 방송협회 (3.8)
  - KOBIA 컨퍼런스 준비회의, 3차 (3.14)

..... 회원사 동정 .....

- YTN방송기술인협회
- 신인협회장 박선우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양창근  
편집주간: 김성훈  
편집위원: 김건희 사상원 장진영  
                  송주호 윤현철  
취재기자: 백선자 김민수  
기획실: 강동규  
인쇄인: 오행나루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02-3219-5635  
팩스: 02-2647-6813  
트위터: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광고문의

02-3219-5635